

서민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斷想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1. 1000조원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외 언론들은 하나 같이 과다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우선 가계부채의 정의부터 보자.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플러스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단체의 부채이다. 그리고 가계신용은 가계대출 플러스 가계구매신용 (백화점 할부구매, 자동차 구매신용 등)이다. 가계대출은 은행 및 비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주택대출을 포함한다. 가계대출의 유형은 생계형 대출, 부동산 구입형 대출, 자영업자의 사업대출 등이다. 참고로 2011년 말 가계부채 1,104조원 중에서 가계신용은 913조원, 가계대출은 858조원이었다. 그리고 2012년 가계신용은 959조원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을 가처분소득의 비중 기준으로 보면 2010년 현재 155.4%로서 세계 9위이며, 이것은 OECD 평균 136.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의 가계부채가 왜 문제인가? 그 이유는 이렇다. 이런 추이가 계속된다면 대출상환 불능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 전체가 부실화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또 한 차례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약 7% 실질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후부터 잠재실질성장률이 급감하였다. 그리고 지난 2년 간 실질성장률은 3% 이하 수준에 머물러 왔다. 올해 2013년에는 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기라는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이런 상태에 이르기 훨씬 전이라도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다. 그

것은 바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상환불능 문제이다. 가계대출의 약 70%는 부동산담보대출이다. 그래서 부동산가격이 정상수준을 회복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 수 있다. 집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채문제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책이 제공되면 위기는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생계형 무담보대출의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무담보 신용으로 빌린 고리 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급등하게 되며 이들이 직장을 잃거나 새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경우 이들을 조기에 구제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고리 대출의 대명사인 대부업체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면서 대부업체가 높은 이자율로 대학생의 고혈을 빼앗아 간다는 비난이 있었다. 2012년 말 현재 자산 200억원 이상의 28개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 잔액은 248억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 숫자는 2011년 말의 500억 9천만 원보다 50% 이상 줄었다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사금융 과대광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대학생 대출을 자제하겠다는 대부업체의 자율결의, 그리고 정부의 학자금 지원확대가 조금씩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담보 없는 서민엔겐 은행대출은 그림의 떡이다. 이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비은행권에 속하는 고금리 대출기관이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수산업협동조합과 대부업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새마을금고에서 빌릴 수만 있어도 괜찮다. 여기서 못 빌리는 영세민이나 대학생은 대부업체로 가서 은행금리 2배 이상의 고리로 돈을 빌린다. 대부업체는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금리로 대출해주고 이를 계기로 고금리, 상환불능, 정부구제, 대부업체 이용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2. 금융활동에 관한 새로운 생활문화를 만들어가야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리고 소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그냥 해결되지 않는다.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신용도가 낮아도 고금리로 아무에게나 마구 빌려주고 정부당국에 손을 벌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만 올라간다. 그뿐만 아니다. 도덕적 해이와 무임승차 문제가 만연해짐으로써 우리경제의 기반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차입자와 대출자는 금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매개체로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기관은 상환능력이 약한 자에게 고리 대출을 권장해서는 안 된다. 빌리는 사람도 철저하게 자기 책임 하에 필요한 만큼만 빌려야 한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라는 환상은 이제 깨졌기 때문이다.

일정 시점에서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빌려준다. 그러나 당장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가난하고 자금여유가 있는 사람이 꼭 부자라고 할 수 없다. 일생동안 사람들의 금융활동에는 차이가 있다.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젊었을 때는 일하면서 저축하고 노년에 들어서는 저축해 놓았던 돈을 쓴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 동안 돈이 없어 힘들게 사는 사람 즉, 서민이나 빈곤층 사람들이 그 사회에 많이 있는 경우이다. 이들 중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은 사회안전망으로 정부 차원에서 구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외 사람들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스스로 노력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센티브와 법적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들은 “오늘 쓰고 내일 갚겠다.”는 것보다 “오늘 저축하고 내일 쓰겠다.”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여론 주도층이 새로운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쓰고 내일 갚겠다.”는 사람은 내일이 되어도 계속 빌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이다.